공무원연금 개선안 문답풀이

5년간 정부 적자보전금 年 1조3천억 절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확정한 연금개선 건의안은 외형상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뼈대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연금적자를 메우는 데 필요한 보전금이 현행 제도보다 51% 이상 줄어 이 기간에 연평균 1조3천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10년 동안은 37%가 줄어 연평균 2조8천억원 수준으로 보전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개혁 후에도 연금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연금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주원인이다.

정부 부담률 12.3%…美·佛보다 훨씬 낮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수준은 왜 다른가.

▲공무원 연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해주기 때문이다. 노동 3권의 제약을 받아 민간보다 보수수준이 불리하며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재산공개 등 재산형성에도 각종 제한을 받는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공무원연금수준이 민간보다 유리하다. 퇴직금이 낮고 국민연금에 비해 기여금인 연금보험료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른 나라 공무원연금의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률 수준은 어떤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는 우리나라가 보수월액의 7%로 미국(6.1%), 일본(7.3%)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정부 부담률은 미국 28.6%, 프랑스 53% 등 주요 외국의 정부부담률이 우리나라(12.3%)보다 훨씬 높으며 연금 재정 적자는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신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같도록 하지 않은 이유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국민연금과 같이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민간보다 낮은 공무원 퇴직금을 2.5배 인상해 민간수준으로 높이고 동시에 공무원이 받는 연금뿐 아니라 내는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퇴직자는 기득권을 인정받아 종전기준대로 연금을 받는 반면, 공무원의 보험료는 대폭 줄어들어 정부의 연금재정부담이 지금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퇴직금도 큰 폭으로 증가해 매년 약 3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든다.

퇴직·명예퇴직 수당은 현행과 같이 운영

-공무원연금개선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면.

▲개선안의 공무원 보험료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7.0%로 국민연금(4.5%)보다 1.6배 더 부담하도록 했다. 퇴직금 수준을 고려할 때 총 연금지급액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6배 정도 더 많다. 그러나 보험료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은 국민연금이 3.2배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2.7배에 불과해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개인이 1억900만원을 내면 연금총액과 퇴직수당을 합친 총퇴직소득으로 3.2배인 3억5천600만원을 받지만 공무원은 1억6천800만원을 내면 총퇴직소득으로 2.7배인 4억6천800만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실운영이 재정악화 요인은 아닌지.

▲공무원연금은 현직 공무원이 퇴직자의 연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공단 기금으로 적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재정의 부실은 공단의 기금운용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은 유지되나.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계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명예퇴직수당도 공무원연금제도와 별개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연합뉴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이 2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현행안 - 건의안 비교

항 목	현 행	건의안
연금산정 기준보수	보수월액 (기준보수의 65%)	기준보수 (소득상한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급여산식	(50%+(재직기간-20)×2%) *20년 재직 상한 : 70%	재직기간×1.9%
비용부담률	(기준보수 : 5.525%) 보수월액 기준 8.5%	기준보수 기준 '09년8.0%, '10년8.3% '11년8.7%, '12년7.0%
급여산정 기초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기간 평균보수 (재직기간별로 단계적 이행)
지급개시 연령	· 60세('98 이후 입용자) · 50~60세('00년말 현재 20년이상 재직자)	65세 (신규자부터 적용)
연금액 조정기준	CPI(물가인상률)+정액조정 (보수 · 물가간 ±2%p내 조정)	· 단계적 CPI 적용 *'09~'13보수물가간 ±3%p내 조정 *'14~'18보수물가간 ±4%p내 조정 *'19~'20:CPI
유족연금 지급률	퇴직연금×70%	60% ('09년 신규자부터 적용)

자료/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대책, 적자구조 개선 미흡

정부 재정부담 가중…'세금 먹는 하마' 될 수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4일 내놓은 개선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미흡해, 국민의 '혈세'로 메워 가야 할 정부의 재정부담이 대폭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발전위의 건의안 재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대로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증가하면서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내년 1조333억원, 2010년 1조29억원, 2011년 1조1천753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어든다.

그러나 기여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2012년부터는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적자보전금이 2012년 1조4천940억원, 2014년 2조7천898억원, 2016년 4조3천176억원에서 2018년에는 6조129억원으로 현재의 5배 정도로 급증하게 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관련 총재정부담금도 올해 7조원 규모에서 2010년 5조2천426억원, 2012년 6조9천324억원로 줄었다가 2014년 8조9천299억원, 2016년 11조2천777억원, 2018년 13조6천512억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다만 건의안대로 개선되면 연금 적자에 따른 정부 보전금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조3천597억원으로, 현행 제도로 운영될 때의 2조7천879억원보다 51.2% 감소하고, 2018년까지 10년간 평균은 현행 4조5천826억원에서 2조8천694억원으로 37.4%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총보수 예산에서 연금 보전금이 차지하는 보전율은 현행 제도하에서 2009년 3.8%, 2018년 12.7%, 2030년 25.4%, 2050년 34.1%, 2060년 37.0%로 증가하지만 개혁안대로라면 2009년 2.3%, 2018년 9.4%, 2030년 20.2%, 2050년 18.7%, 2060년 21.5%로, 현행보다 20%에서 최고 5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연금관련 총재정부담금은 건의안대로 개선되면 향후 5년간 평균 6조1천858억원, 10년간 평균 8조7천547억원으로 현행보다 12.7%와 10.4% 각각 감소하고 총재정부담률도 현행 제도에서는 2009년 12.7%, 2018년 23.2%, 2030년 36.5%, 2050년 44.8%, 2070년 47.4%에 달하지만 개선안에서는 2009년 11.0%, 2018년 21.3%, 2030년 32.8%, 2050년 31.0%, 2070년 3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영수회담 핵심 화두는 '경제'

오늘 李대통령-정세균대표 회동

경제위기 돌파 초당적 협력 기대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25일 오찬 회동 테이블에 올려질 '메뉴'는 뭘까. 회동 결과가 향후 정국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영수회담 의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회동의 최대 화두는 경제문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국가적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극복방안과 해법을 찾는데 상당 시간이 할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서다. 이와 관련,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경제정책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극명하기 때문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감세, 주택공급 확대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법안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대표는 "부자·특권층 정책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명박 정권의 조세정책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 전반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경제부총리제 부활, 부가가치세 인하 등 대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와 언론장악 등 이명박 정부 6개월의 실정을 거론해 가며 지난 10년의 '좌편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궤도수정 움직임을 '과거회귀'로 규정, 브레이크를 거는데도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인적쇄신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도 크다. 표적·보복사정 논란과 사정중단에 대한 요청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제안하고 청와대가 화답하는 형식으로 영수 회담 정례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여야정 원탁회의를 공개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도 "가급적 야당과 많이 만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민주당 망친 분이…盧 배은망덕"

'DJ 측근' 박지원 의원 盧 '호남당 발언' 비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호남당화' 우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호남권 의원이나 노 전 대통령과 앙금이 있는 구 민주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동교동계의 불쾌감이 상당하다.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 의원은 2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에도 유독 호남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배은망덕한 말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사실 민주당을 망친 분은 노 전 대통령이다. 민주당 정책으로, 공약으로, 민주당 지지세력으로 당선됐는데 당을 분당시켰다"며 "결국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표를 이번 선거에서 반 토막내 한나라당에 정권을 바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구 민주계 한 의원은 "호남권은 아직도 전 정권에 대해 풀리지 않은 서운함이 남아있는데 호남 민심에 불을 지르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성민 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을 지지했던 호남인들에 대한 용납될 수 없는 배신행위이자, 지역주의를 증폭시키려는 망언"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국정 파탄과 민주세력 분열로 정권을 한나라당에 헌납했던 친노 세력이 호남을 희생양으로 정치복귀를 꾀하려는 술책이자 국민 기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친노 진영이나 비호남권 의원 사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언급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상반된 반응도 내놓고 있다.

친노 성향의 한 의원은 "비수도권의 호남인들은 더 이상 민주당에 몰표를 주지 않는다"며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정책의 선명성과 진보정당의 기치를 분명히 함으로써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